

# 코로나19 경제위기 관련 경총·전경련 정책 비판

정경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0.4.13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는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문의: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 주소: 04518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 전화: 02-2670-9110 | 전송: 02-2635-1134

# 목차

〈요약〉 .....	1
1. 들어가며 .....	6
2. 경총과 전경련 요구의 핵심내용 .....	7
3. 세계경제단체연합 ‘노동’과 대화 강조, 역행하는 한국사업자단체	10
4. 경제위기 사회위험을 노동자, 자영업자와 국민에게 전가하다 .....	13
5. 경제위기에 또다시 드러나는 자본의 탐욕 .....	15
6. 고비용·저생산성 구조개선? 재벌중심 경제구조 개혁이 답이다 .....	17

# 요약

이 보고서는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과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 제기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정책과제의 핵심 내용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밝히고자 함.

○ 사업자단체 경총과 전경련은 지난 3월 23일, 25일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함. 경총은 37쪽 분량의 경제노동관련 8대 분야 40개 개선과제를, 전경련은 79쪽 분량의 25개 산업분야 54개 정책 개선과제를 제출했음.

경총이 건의한 입법 개선 과제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계의 일반적 요구사항이라면 전경련의 요구는 산업별로 구체적인 정책 개선과제라고 볼 수 있음. 경총의 8대 분야 요구들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고비용·저생산성”이라 할 수 있음. 경총은 저생산성의 주요 원인을 임금·세금 등으로 꼽고 있음. 실제 경총이 요구한 8대 분야 입법 요구는 일상 해고를 포함한 노동유연화와 법인세·소득세 인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경련의 요구는 크게 ‘노동 유연화 및 기업 비용 축소’, ‘규제완화’, ‘기타’로 분류할 수 있음. 전경련이 요구한 산업일반 정책 18개 중 노동유연화와 기업 비용 축소와 관련한 요구가 9개로 제일 많고, 규제완화 7개, 기타 2개 순으로 나타남.

○ 전경련은 3월 25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발표에 이어 26일 세계경제단체연합 GBC(Global Business Coalition)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2012년에 설립된 GBC는 기업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통의 입장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역 및 국제 수준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책을 옹호한다고 소개하고 있음. GBC의 멤버는 한국 전경련을 포함한 16개 사업자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음.

GBC는 3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두 가지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GBC의 두 가지

공동성명서에서 공통된 핵심 내용은 무역장벽과 관련한 새로운 규제에 대한 우려와 국제 무역 흐름 보존, 생명 보호와 관련한 필수 제품 및 서비스의 글로벌 공급망 보호, 그리고 코로나19가 고용과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완화에 관한 것으로 꼽을 수 있음. 그리고 코로나19가 고용과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 및 그 대표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전경련이 발표한 긴급제언 내용은 수출·무역 분야와 상관없는 내용을 총망라하고, 경제 위기와 상관없이 그 이전에도 요구했던 주 52시간 근로 예외 확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최대 단위기간 연장 등 노동유연화도 포함함. ‘노동’과의 대화를 강조한 GBC와 달리 전경련은 노동유연화를 요구하며 노동자와 노동조합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GBC 공동성명서 내용에 역행하고 있음.

○ 사업자단체인 경총·전경련은 경제위기 사회위험을 노동자, 자영업자와 국민에게 전가하려고 함. 이들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적인 요구 사항으로 해고 요건 완화를 포함한 ‘노동 개혁’을 제기하고 있음. 노동유연화 입법 요구는 사실상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임.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가능, 현행과 같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할 때 뿐만 아니라 ‘인력 감축 등 경영 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도록 사업주가 마음 먹기에 따라 해고가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그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등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고 과로사 기준을 초과하는 노동을 가능하게 하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개악안이라 할 수 있음.

경총·전경련은 자영업자에게도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위험을 전가하려 함.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일·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 등 폐지 또는 완화’ 요구임.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을 규정하고 있는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것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우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그런데 경총·전경련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한시적으로 폐지하자고 요구하고

있음. 사실 이 요구는 경제위기 이전부터 자본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규제완화임. 그런데 경제위기를 기회삼아 법에 규정된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 목적과 취지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함.

전경련은 경제위기를 틈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도입했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기등재 약제 재평가 제도’도 무력화하려고 함.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개정했던 화평법을 자본세력은 화학물질 규제로 비용이 증가한다고 하면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와 등록기간 유예를 요구함. 그리고 기존에 등재된 의약품을 재평가해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평가를 유예하자고 요구함. 이것은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를 줄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무력화하고 제약업계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의도임.

○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비정규직 확대, 상시적 구조조정과 불안정 고용이 고착되었음. 국가와 자본은 고통분담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금모으기 운동’, 노동자 임금삭감을 밀어붙이고, 구조조정, 정리해고, 비정규직 양산을 입법화하며 이를 비판하는 노동운동 진영에 대해 ‘나라가 망하는데 노동자들이 제 잇속만 차린다’는 이데올로기로 공격했음. 이것은 ‘재난 자본주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임. 재난 자본주의(Disaster Capitalism)는 재난으로 시민들이 충격에 휩싸여 있을 때 국가가 보호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기업에게 넘기고 상품화하는 것을 의미함.

자본세력은 이번 경제위기를 기회 삼아 국가가 국민을 위해 수행해야 할 역할을 ‘경제 활력 제고’라는 명목으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원리로 전환하려고 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투자·금융 전문가로 구성하자는 요구도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시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배구조로 개편하려는 목적임.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같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할 때 경총·전경련은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인하와 불로소득의 상속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음. 경총이 요구한 ‘기업과 국민 부담 여력을 감안한 지속가능 사회보장체계 확립’ 요구도 사실상 사회보험에 대한 사업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함. 전경련은 이번 기회를 통해 일명 ‘원샷법’이라 불리는 ‘기업활력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업종과 기업으로 확대하려고 함. 기업의 인수합병 등 사업재판을 쉽게 해주는 법으로 이것은 구조조정 또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경제위기 극복이 아니라 자본세력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임.

○ 경총은 한국 경제구조 문제를 높은 임금 수준과 고용형태와 규모에 따른 과도한 임금 격차로 진단하며 고비용·저생산성 구조 개선을 주장하고 있음. 그들의 논리는 임금·금리·물류비용·지대 등 비용 상승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효율이 오르지 않고 오늘날의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함.

고비용·저생산성 문제는 지난 경제위기 때마다 자본세력이 거론했던 것임. 그리고 개혁 방안으로 노동 유연화를 요구하고 관철해왔음. 그런데 경제구조 문제를 진단할 때 그들은 ‘고비용’ 측면만 강조하고 ‘저생산성’ 측면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하지 않음. 왜냐하면 저생산성의 책임은 상당 부분 기업에 있기 때문임. 재벌기업들은 그 동안 정경유착에 의해 특정산업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고 금융·재정지원을 받아 기업확장에 중점을 둔데 반해 착실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내재적 경쟁력을 갖추는 일은 등한시켰음. 이번 경총과 전경련의 코로나19 관련 정책요구안에서도 노동 유연화, 법인세·상속세 인하와 같은 고비용 관련 정책만 있을 뿐 저생산성과 관련한 개혁 정책은 거의 없음.

재벌기업들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경위하던 골목상권이나 적합업종까지 진출하며 경제력집중을 심화시켰고, 대기업본사와 거래관계를 갖는 제조하도급이나 유통납품업체, 가맹·대리 점주들과 그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거래조건과 고용조건을 악화시키면서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함께 불공정거래구조 문제도 심화시켰음.

저임금 중심의 재벌기업 경제집중의 경제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자체를 바꾸는 경제구조 개혁이 필요함. 코로나19 사태에 드러나는 경제 위기는 바로 한국 경제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더 심화되는 것임. 코로나19 이후에도 다른

전염병과 기후위기 등으로 사회재난은 반복되어 나타날 것임.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위험은 누적되어 더 심화될 것이고 그 위험은 하층에게 몰아질 것임.

자본세력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 때마다 기회로 삼아 자신의 요구들을 관철해왔음. 이번에도 경총·전경련을 앞세운 자본세력은 그 탐욕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음. 위기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기회임. 외환위기, 금융위기와 현 코로나19 경제위기의 원인인 한국 경제의 불평등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개혁하고 내수 경제 강화, 고용 안정과 실업·빈곤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1. 들어가며

재난은 그 사회가 가진 문제들과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냄.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공공의료의 취약성과 전염병에 노출된 노동안전보건 문제, 그리고 자영업자 경제 문제가 드러난 것처럼 그 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재난을 계기로 그 취약성이 드러나게 됨. 이번 코로나19는 점염병 재난을 넘어 경제위기라는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음. 과거에 구축된 대기업 중심 성장 구도의 경제 구조에서 우리는 이미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 위기를 겪고 난 후 실업, 빈곤, 비정규직 양산, 불평등이 심각해지는 것을 보았음. 그리고 경제위기 이후 ‘부’가 누구에게 집중되는지,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 또한 알게 되었음.

코로나19 경제위기는 당장 고용과 일자리 문제에서 드러나고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노동자 중 81%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국제노동기구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분석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숙박업·요식업·제조업·도소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고용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sup>1)</sup> 그리고 이미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노동자는 임금삭감, 해고 등에 직면한 상황에 놓여있음.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위기도 심각함.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제위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정책들이 제기되고 있음.

사업자단체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과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은 지난 3월 23일, 25일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함. 경총은 37쪽 분량의 경제노동관련 8대 분야 40개 개선과제를, 전경련은 79쪽 분량의 25개 산업분야 54개 정책 개선과제를 제출했음.<sup>2)</sup> 이 글은 경총·전경련 요구의 핵심 내용을 살펴본 후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밝히고자 함.

1) 한겨레, 2020.04.08., ILO “코로나19로 전세계 노동자 81% 27억명에 영향”.

2) 한국경영자총협회, 2020.03.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경제노동 관련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2020.03.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 2. 경총과 전경련 요구의 핵심내용

경총이 건의한 입법 개선 과제는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 투자활력 회복과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음. 전경련은 코로나19 경제위기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퍼펙트 스톱’에 직면, 항공·관광업의 한계상황과 자영업자 매출 감소로 내수서비스 위기, 기초체력이 약한 기업과 자영업자의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을 하고 있음. 경총의 내용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계의 일반적 요구사항이라면 전경련의 요구는 산업별로 구체적인 정책 개선과제라고 볼 수 있음.

경총의 8대 분야 요구들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고비용·저생산성”이라 할 수 있음. 경총은 저생산성의 주요 원인을 임금·세금 등으로 꼽고 있음. 실제 경총이 요구한 8대 분야 입법 요구는 일상 해고를 포함한 노동유연화와 법인세·소득세 인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1] 경총의 입법건의 8대 분야별 주요 내용

8대 분야	경영계 입법건의 주요 내용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 -연구·인력개발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일·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 등 폐지 또는 완화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차등의결과, 신주인수선택권 도입 -주주총회 결의요건, 감사 선임시 3%를 폐지 -국민연금기금운용위 민간투자·금융 전문가로 구성 -대량보유 보고 대상 강화, 경영참여 목적행위 개정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연부연납 거치기간 연장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직무수행능력 부족시 해고 가능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경영상황에 따라 회사가 근로조건을 불리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근로시간제도 운영 유연성 확대 -취업규칙 변경의 불가피성 인정될 경우 절차 완화 -파견 허용 범위 대상 완화

	-기간제 2년 사용기간 제한 완화
고비용·저생산성 구조 개선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도입 절차 완화 -최저임금 구분 적용 개선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 합리화 개선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노사관계 구축	-사업장 내 시설 점거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 삭제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규율 규정 신설,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 삭제
기업과 국민부담 여력을 감안한 지속가능 사회보장체계 확립	-건강보험료 보험료율 결정주기를 최대5년으로 명시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지원 상시화 -임의계속가입자 기반확대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하 및 국고지원 신설 -국민연금기금의 정부 정책재원 활용금지 -모성보호사업은 고용보험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원토록 개정 -장기요양기관 시설운영실태 조사권한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부여
안전·환경 규제 실효성 제고를 통한 선진안전시스템 구축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수급인과의 협력·조정 등 한정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기준 규제심사 의무화 -산재예방사업 정부 일반회계 출연규모 개정
국제수준에 맞는 경영책임의 적정성 확보와 형벌 개선	-근로시간 위반 형사처벌 폐지 또는 축소 -파견허용업무 위반행위 형사처벌 폐지 -작장폐쇄 정차와 요건 위반행위 형사처벌 폐지 -경영인의 경제범죄 가중처벌 기준 완화 -특경법 위반 유죄판결 경영인의 취업제한제도 등 완화 -상법상 특별배임죄 적용 배제 위한 요건으로 '경영판단의 원칙' 신설

- 자료 : 한국경영자총협회(2020.03.)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경제·노동 관련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

전경련의 요구는 크게 ‘노동 유연화 및 기업 비용 축소’, ‘규제완화’, ‘기타’로 분류할 수 있음. 전경련이 요구한 산업일반 정책 18개 중 노동유연화와 기업 비용 축소와 관련한 요구가 9개로 제일 많고, 규제완화 7개, 기타 2개 순으로 나타남. 이외 전경련은 유통 7개, 관광 5개, 건설 4개, 물류 4개, 정유 3개, 항공 3개, 콘텐츠 2개, 의료·바이오 2개, 반도체 1개, 가전 1개, 디스플레이 1개, 제약 1개, 자동차 1개, 중공업 1개로 산업별로 구체적인 건의과제들을 발표함.

[표 2] 전경련의 산업일반 주요 건의과제

구분	현황 및 문제점	정책과제
노동 유연화 및 기업 비용 축소	코로나19관련 법인세 신고·납부 유예제도 대상 제한적	피해 업종(대, 중소기업 불문) '20년 신고·납입분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6개월 유예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제도	주 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활용 애로	
	생산차질에 따른 기업의 신속적 대응 필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최대 단위기간 연장 (3개월→1년)
	민간 국내 투자 하락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설비투자 금액의 10%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대·중견 기업은 공공기관 임대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	공항, 역사 등 공공기관 임대료 인하대상 대기업 포함
	공공시설의 임차료와 도로점용료 수익 매년 증가	공공시설 임차료/도로점용료 한시적 인하 (50%이상 감면)
	코로나19 사태로 실제 교통유발 대비 부담금 과중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1년) 인하
	해외 현장실사 불가로 해외법인 대출 연장 곤란	국책은행의 대출금 상환 연장 후 실사
	산업현장 내 신속한 코로나 진단 조치 필요	코로나19 검사 위탁기관에 기업 사내진료소 포함
규제완화	재정확대·통화완화 중심의 대책으로 위기극복에 한계	코로나궤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한시적(2~3년) 규제유예’ 추진
	선제적 사업재편 필요해도 기활법 적용대상 한정적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적용대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
	규제비용 증가로 화학물질 취급하는 국내 산업 타격 우려	화평법 상 화학물질 등록기간 1년씩 유예
	전세계적 교역감소, 경기 침체 대응 위한 국제 공조체제 중요	보호무역조치 동결(감축) 협의
	높은 자본시장 개방성 감안시 통화스왑 규모, 대상국 확대 필요	주요 기축통화국과의 통화스왑 체결·확대
	행정조사가 기업의 위기극복을 저해할 우려	규제당국의 기업대상 행정조사 한시적 1년 유예
	주가급락으로 인한 주식 담보대출 반대매매 가능성 확대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반대매매 유예 및 채무보증 (1년)
기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시 해외 투자자금 유출 등 우려	민관 합동 한국 기업·투자환경 설명회 추진
	전 세계 179개국에서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 시행	교역주요국 입국금지 해제 적극 노력 건강증명서 발급→신속통과 요청

- 전국경제인연합회(2020.03.)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요구사항을 ‘노동 유연화 및 기업 비용 축소’, ‘규제완화’, ‘기타’로 분류하여 정리함

[표 3] 전경련의 산업별 주요 건의과제

<p>&lt;유통&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li> <li>- 대형마트 의무휴업 한시적(1~3년) 폐지</li> <li>- 의무휴업일 온라인 주문, 배송 허용</li> <li>- 대형마트 내 입점한 점포 의무휴업 제외</li> <li>- 지역사항 상품권 사용처 확대</li> <li>- 판매촉진규제 적용예외 확대</li> <li>- 판매장려금 지급 허용</li> </ul>	<p>&lt;관광&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 취소수수료 및 기타 발생경비 한시 지원</li> <li>- 호텔업에 대한 한시적 세제 지원</li> <li>- 관광·서비스업에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li> <li>- 관광호텔 TV수신료 합리화</li> <li>- (중식이후)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li> </ul>
--	---

<p>&lt;건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공사 피해구제 제도 및 인센티브 제공</li> <li>- SOC 예산 확대 및 조기 집행</li> <li>- 예비타당성조사 금액기준 상향</li> <li>- 건설현장 계약업무 지침 및 가이드라인 보강</li> </ul>	<p>&lt;물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택배차량 증차 기준 및 절차 완화</li> <li>- 택배차량 방역물품 (마스크 등) 지원</li> <li>- 수출 선박 대기시간 최소화</li> <li>- 화물차 안전운임제도 유예기간 연장</li> </ul>
<p>&lt;정유&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유 관세/수입부과금 한시적 면제</li> <li>- LPG생산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및 면제</li> <li>- 석유정제공정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li> </ul>	<p>&lt;항공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사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확대</li> <li>- 국제선 항공기 내 통신판매 허용</li> <li>- 항공운송지원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li> </ul>
<p>&lt;콘텐츠&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한시적 면제</li> <li>- 영화산업 특별고용업종 지정</li> </ul>	<p>&lt;의료·바이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li> <li>- 연구개발특구 내 상업 생산시설 허용</li> </ul>
<p>&lt;반도체&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 비자 기간 연장</li> </ul>	<p>&lt;가전&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전제품 수요 창출 촉진제도 마련</li> </ul>
<p>&lt;디스플레이&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장비의 항만 창고비 등 관리비 부담 경감</li> </ul>	<p>&lt;계약&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등재 약제 재평가 시행 잠정 유예</li> </ul>
<p>&lt;자동차&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li> </ul>	<p>&lt;중공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전·발전사 관련 제품 생산업계 지원</li> </ul>

-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2020.03.),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 3. 세계경제단체연합 ‘노동’과 대화 강조, 역행하는 한국사업자단체

전경련은 3월 25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발표에 이어 26일 세계경제단체연합 GBC(Global Business Coalition)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2012년에 설립된 GBC는 기업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통의 입장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역 및 국제 수준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책을 옹호한다고 소개하고 있음. GBC의 구성은 16개 사업자단체들로 호주사용자단체 Ai Group, 독일경영자총협회 BDA, 비즈니스유럽, 영국산업연맹 CBI, 캐나다상공회의소CCC, 스페인기업연합 CEOE, 모로코기업총연합회 CGEM, 인도산업연맹 CII, 브라질전국산업연맹 CNI, 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 Confindustria, 이집트산업연맹 FEI, 프랑스기업인연합 MEDEF, 터키산업경제협회 TUSIAD, 아르헨티나산업연맹 UIA, 미국상공회의소 USCC 그리고 한국전경련 KFI로 이루어져 있음.<sup>3)</sup>

3) GBC, 2020.03.25, “The Global Business Coalition Members Call to G20 for Measures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 Mitigate its Effects on People & Markets”.

실제 GBC는 3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두 가지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첫번째 공동성명서는 “GBC 회원들은 G20에 COVID-19 확산 방지 대책 및 사람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대책을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핵심 내용은 “현재의 공중 보건 위기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세계 정부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글로벌 가치 사슬 중단 최소화와 불필요한 새로운 규제와 무역 장벽 자제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여 경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민간 부문과 정기적이고 투명한 방식의 소통을 요구하고 있음. 그리고 GBC와 소속 경제단체들은 “국제기구와 우리의 각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전적인 약속을 반복”하면서 “코로나19가 고용과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 조치의 내용과 이행에 대해 기업, 근로자 및 그 대표와의 지속적인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두 번째 공동성명서는 “GBC 회원들은 G20에 생명 보호 장비, 의약품 및 의료용품의 글로벌 공급 활성화 방안을 요청한다”는 제목으로, 코로나19 시기 무역규제의 확산과 무역규제로 인한 중요한 공급물자 생산 지장 초래와 공급의 병목현상 악화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있음.<sup>4)</sup>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기술에 대한 정부와 다자간 단체들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생명 구조 및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제품 및 서비스의 글로벌 공급망 보호와 지속적인 작동, 중단 없는 국제 무역 흐름 보존 등을 요청하고 있음. GBC는 글로벌 공급망 작동을 요청하면서도 “필수 시설과 인력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주의사항을 준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이 공동성명서에서도 25일 성명서에서 밝힌 코로나19가 고용과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완화 관련한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이상과 같이 GBC의 두 가지 공동성명서에서 공통된 핵심 내용은 무역장벽과 관련한 새로운 규제에 대한 우려와 국제 무역 흐름 보존, 생명 보호와 관련한 필수 제품 및 서비스의 글로벌 공급망 보호, 그리고 코로나19가 고용과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완화에 관한 것으로 꼽을 수 있음. 이와 관련한 GBC의 멤버들이 발표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인

4) GBC, 2020.03.26, “The Global Business Coalition Members Call to G20 for Measures to Enable Global Supply of Vital Protective Gear, Medicines and Medical Supplies”.

도산업연맹은 3월 25일 수출 증진을 위한 조치와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중소기업 자금 관련 조치 제안 등을 발표함.<sup>5)</sup> 비즈니스유럽은 4월 2일 GBC의 두 가지 공동성명서의 세계 가치 사슬 혼란 최소화, 무역 장벽 억제 위한 대책 요구, 필수 건강 제품의 자유로운 이동, 대유행에 대한 경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의 정기적이고 투명한 의사소통 요구 내용 등을 발표함.<sup>6)</sup> 영국산업연맹은 4월 3일 영국안전보건청 HSE와 영국노동조합총연맹 TUC와 함께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함.<sup>7)</sup>

한편 전경련은 25일 공동성명서(원문과 번역문)만 발표하고, 공동성명서 제목도 “세계 경제단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시장 영향 최소화」 건의”로 번역하여 ‘사람’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시장’만 강조하여 발표함. 뿐만 아니라 25일에 발표한 전경련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내용은 수출·무역 분야와 상관없는 내용을 총망라하고, 경제 위기와 상관없이 그 이전에도 요구했던 주 52시간 근로 예외 확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최대 단위기간 연장 등 노동유연화 요구도 포함하여 발표함. GBC는 코로나19가 고용과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 및 그 대표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강조한 반면 전경련은 노동유연화를 요구하며 노동자와 노동조합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GBC 공동성명서 내용에 역행하고 있음.

5) 인도산업연맹 CII(<https://www.cii.in>),

CII, 2020.03.25, “CII Suggests 10-Point Action to Provide a Boost to Exports Amidst the Covid 19 Pandemic”, CII, 2020.03.25. “CII Sets up Fund for MSME to Tackle Covid-19”.

6) 비즈니스유럽(<https://www.buinessurope.eu>).

Businesseurope, 2020.04.02, “Business calls for measures to mitigate impact of COVID-19”.

7) 영국산업연맹 CBI(<https://www.cbi.org.uk>).

CBI, 2020.04.03, “CBI issues joint statement with HSE and TUC on safe working”.

#### 4. 경제위기 사회위험을 노동자, 자영업자와 국민에게 전가하다

사업자단체인 경총·전경련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적인 요구 사항으로 해고 요건 완화를 포함한 ‘노동 개혁’을 제기하고 있음. 경총의 8대 분야 요구 중 5대 분야 내용이 노동시장 유연성, 최저임금, 쟁의행위 금지, 노동안전보건 기준 완화, 근로시간 위반과 파견법 위반행위 처벌 완화에 속함. 전경련은 산업일반 주요 건의 정책으로 주 52시간 근로 예외 확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최대 단위기간 연장으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이와 같은 경총·전경련의 요구는 사실 새롭지 않음. 1997년 외환 위기에도 정리해고제에 관한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파견법이 제정되었음. 그 이후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겼음. 그런 식으로 자본은 경제위기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했음.

경총의 노동유연화 입법 요구는 사실상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임.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가능, 현행과 같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할 때 뿐만 아니라 ‘인력 감축 등 경영 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도록 사업주가 마음 먹기에 따라 해고가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도 노동자 과반수 동의에서 경영 환경 변화로 불가피할 경우 노사 협의만으로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등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고 과로사 기준을 초과하는 노동을 가능하게 하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계약안이라 할 수 있음.

고용불안이 가져오는 일차적인 부작용은 실직자 가족의 생계불안 문제임. 그러나 실직자는 단순히 경제적 파탄을 겪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이 이 사회에서 쓸모없게 되었다는 실망감에서 오는 심리적 파탄을 겪게 되며 그 결과 실업률의 증가는 이혼·가출·범죄·자살·질병·살인 등을 증가시킴. 소득불평등과 실업률이 범죄 발생 증가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계속 나오고 있음.<sup>8)</sup> 실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중인 근로자도 고용불안으로 고통을 겪게 됨.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이

저하됨으로써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지게 됨. 고용불안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은 새로운 비효율의 원천이 됨. 뿐만 아니라 실업자의 증가와 현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따라 사회적·정치적 불만이 높아지고 이는 사회불안, 정치불안으로 연결됨.<sup>9)</sup>

경총·전경련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위험을 전가하려 함.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일·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 등 폐지 또는 완화’ 요구임.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을 규정하고 있는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것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우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그런데 경총·전경련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한시적으로 폐지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며 전경련은 한시적 기간을 1년에서 3년까지 요구하고 있음. 사실이 요구는 경제위기 이전부터 자본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규제완화임. 그런데 경제위기를 기회삼아 법에 규정된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 목적과 취지 자체를 무력화하고 재벌기업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함.

전경련은 경제위기를 틈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도입했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기등재 약제 재평가 제도’도 무력화하려고 함.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개정했던 화평법을 자본세력은 화학물질 규제로 비용이 증가한다고 하면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와 등록기간 유예를 요구함. 그리고 기존에 등재된 의약품을 재평가해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평가를 유예하자고 요구함. 이것은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를 줄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무력화하고 제약업계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의도임.<sup>10)</sup> 결국 자본세력은 경제위기 극복과 상관없이, 경제위기를 기회삼아 자신

8) 장지원·조상현, 2019, "불평등과 범죄발생에 관한 연구-소득불평등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통권 76호, 419~448쪽.

9) 윤진호, 1997, “심각한 경제위기와 고용불안,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황해문화 15, 315~316쪽.

10) 경향신문, 2020.04.04., “코로나 틈타 ‘제 살길만 찾는 재계’”.

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들을 요구한 것임. 이 요구대로 한다면 결국 실업, 빈곤, 안전, 양극화 문제 등을 더 심화시킬 것임.

## 5. 경제위기에 또다시 드러나는 자본의 탐욕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비정규직 확대, 상시적 구조조정과 불안정 고용이 고착되었음. 국가와 자본은 고통분담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금모으기 운동’, 노동자 임금삭감을 밀어붙이고, 구조조정, 정리해고, 비정규직 양산을 입법화하며 이를 비판하는 노동운동 진영에 대해 ‘나라가 망하는데 노동자들이 제 잇속만 차린다’는 이데올로기로 공격했음. 이것은 ‘재난 자본주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임. 재난 자본주의(Disaster Capitalism)는 재난으로 시민들이 충격에 휩싸여 있을 때 국가가 보호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기업에게 넘기고 상품화하는 것을 의미함.<sup>11)</sup> 자본세력은 이번 코로나19 경제위기 또한 기회 삼아 노동 유연화를 할 수 있는 입법화를 위해 정부와 21대 국회를 대상으로 로비 작업이 진행할 것임.

자본세력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수행해야 할 역할을 ‘경제활력 제고’라는 명목으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원리로 전환하려고 함. 대표적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투자·금융 전문가로 구성하는 요구를 통해 알 수 있음. 이것은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시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배구조로 개편하려는 목적임. 뿐만 아니라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규제당국의 기업대상 행정조사 유예, 노동 안전보건조치 의무 기준 완화, 기간제 2년 사용기간 제한 완화, 최저임금 관련, 근로시간 위반 처벌 기준 완화, 파견허용업무 위반행위 형사처벌 폐지, 경영인의 경제범죄 가중처벌 기준 완화 등의 요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실업과 빈곤, 불평등과 양극화를 막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무너뜨리는 것임.

11) 임순광, 2010, “사회지표를 말하다편-재난 자본주의와 안전”, 레프트대구 2호, 275~285쪽.  
캐나다 출신의 사회운동가이자 저술가인 나오미 클라인의 저서 「쇼크 독트린(The Shock Doctrine)」에서 재난 자본주의(Disaster Capitalism) 개념은 “시민들이 충격에 휩싸여 있는 사이에 국가의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을 사기업에게 매각하여 상품하는 시스템”이라 정의함.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같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할 때 경총·전경련은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인하와 불로소득의 상속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음. 영세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 지원이 필요한데 법인세를 인하한다면 세수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국민 부담은 더 가중될 것임. 이것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함.

경총은 이런 요구의 주요 목적을 “기업의 투자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그러나 재벌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과 관련한 기업의 실물자산 투자에는 과소투자하고, 현금성 자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자산의 형태로 축적하고 있음.<sup>12)</sup> 그리고 경제위기에서 기업의 사업과 관련된 새로운 투자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면 투자를 하기 힘들 수 있음. 이런 조건에서 기업의 투자활력을 위한 법인세·상속세 인하 요구는 타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산불평등과 부의 대물림이 더 심화될 것임.

경총이 요구한 ‘기업과 국민부담 여력을 감안한 지속가능 사회보장체계 확립’ 요구도 사실상 사회보험에 대한 사업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함. 대표적으로 경총은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건강보험 보험료율 결정주기 변경을 요구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1년마다 평가를 통해 이행실태와 정책성과를 높이고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것을 5년마다 하게 되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됨. 또한 보험료 부담주체들이 부담해야할 보험료율 결정방식도 제대로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 됨. 이 외에도 경총은 고용보험사업에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제외하고 일반회계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등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서 사업주의 부담을 축소하고 국고로 채우는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함. 사회재난시기 사회적으로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보장’으로 포장하면서 실제 자본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임.

전경련은 이번 기회를 통해 일명 ‘원샷법’이라 불리는 ‘기업활력법’(기업활력 제고를 위

12) 김진희, 2017, “기업의 사내유보금과 투자효율성이 자산투자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제30권 제1호, 255~256쪽.

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업종과 기업으로 확대하려고 함. 기업의 인수합병 등 사업 재판을 쉽게 해주는 법으로 이것은 구조조정 또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것은 일자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게 되고 경영계에만 유리한 법이라 할 수 있음. 경총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횡령 등과 같은 정경유착과 재벌세습 경제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기준을 완화하자고 요구하고 있음. 그리고 일상 해고 가능, 현행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 삭제,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또는 축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 규정 삭제 등 노동기본권까지 없애면서 한국 경제가 그동안 대기업 주도로 성장해오면서 겪어야했던 부의 집중, 양극화 심화, 공정경제 실종 등의 부작용을 그나마 막아낸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려고 하고 있음. 결국 경제위기 극복이 아니라 자본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임.

## 6. 고비용·저생산성 구조개선? 재벌중심 경제구조 개혁이 답이다

경총은 한국 경제구조 문제를 높은 임금 수준과 고용형태와 규모에 따른 과도한 임금 격차로 진단하며 고비용·저생산성 구조 개선을 위해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낡고 불합리한 최저임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함. 즉 그들의 논리는 임금·금리·물류비용·지대 등 비용 상승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효율이 오르지 않고 오늘날의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함.

고비용·저생산성 문제는 지난 경제위기 때마다 자본세력이 거론했던 것임. 그리고 개혁 방안으로 노동 유연화를 요구하고 관철해왔음. 그런데 경제구조 문제를 진단할 때 그들은 ‘고비용’ 측면만 강조하고 ‘저생산성’ 측면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하지 않음. 왜냐하면 저생산성의 책임은 상당 부분 기업에 있기 때문임. 재벌기업들은 그 동안 정경유착에 의해 특정산업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고 금융·재정지원을 받아 기업확장에 중점을 두는데 반해 착실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내재적 경쟁력을 갖추는 일은 등한시했음. 이번 경총과 전경련의 코로나19 관련 정책요구안에서도 노동 유연화, 법인세·상속세 인하와 같은 고비용 관련한 정책만 있을 뿐 저생산성과 관련한 개혁 정책은 거의 없음.

재벌기업들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경위하던 골목상권이나 적합업종까지 진출하며 경제력집중을 심화시켰고, 대기업본사와 거래관계를 갖는 제조하도급이나 유통납품업체, 가맹·대리 점주들과 그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거래조건과 고용조건을 악화시키면서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함께 불공정거래구조 문제도 심화시켰음.

한국의 재벌체제는 ▷총수일족이 소수의 지분으로 사적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체제이자 사업연관이 없는 부문까지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체제 ▷저임금-장시간-과로노동-비정규노동 및 노조파괴를 낳는 반노동체제 ▷국민수탈(국가의 각종 지원과 특혜)과 노동자 착취로 만들어지는 초과이윤 축적체제라 할 수 있음.<sup>13)</sup>

저임금 중심의 재벌기업 경제집중의 경제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자체를 바꾸는 경제구조 개혁이 필요함. 코로나19 사태에 드러나는 경제 위기는 바로 한국 경제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더 심화되는 것임. 코로나19 이후에도 다른 전염병과 기후위기 등으로 사회재난은 반복되어 나타날 것임. 전염병 재난 현황을 보더라도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2018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와 같이 전염병 재난은 발생 주기도 짧아지고 피해도 확대되고 있음.<sup>14)</sup>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위험은 누적되어 더 심화될 것이고 그 위험은 하층에게 몰아질 것임.

자본세력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 때마다 기회로 삼아 자신의 요구들을 관철해왔음. 이번에도 경총·전경련을 앞세운 자본세력은 그 탐욕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음. 위기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기회임. 외환위기, 금융위기와 현 코로나19 경제위기의 원인인 한국 경제의 불평등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개혁하고 내수 경제 강화, 고용 안정과 실업·빈곤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13) 민주노총·민중공동행동·을들의연대(추) 외, 2019, “문대인 정권 2년, 재벌개혁은 어디에?”, 56쪽.

14) 행정안전부, “2018 재난연감”.